

제45권: 2008. 2. 15.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 동 원 박 혜 진

1. 개요	1
2.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	2
3. 농업·농촌의 가치	6
4. 농산물 시장개방	10
5. 도시민의 농업·농촌 수요	13
6. 시사점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김동원** 부연구위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개요

농촌인구의 노령화, 농촌-도시 간 양극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업 피해대책과 구조조정 문제 등 2007년 한 해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하였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생산자인 농업인은 소득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바라고 있고, 도시민은 식품안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의 농업·농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08년 2월 25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정부에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고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2,000명(852건 회수)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 농업·농촌 가치 인식, 농산물 시장개방, 농업에 대한 기대와 요구 등이었으며, 조사 내용 가운데 특징적인 결과를 정리하였다.

- **도시민(응답자 1,500명)**: 전국 도시지역 19세 이상 성인남녀(제주도 포함)를 대상으로 전국 인구비례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법으로 표본 선정, 1:1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2.53\%$ point>
- **농업인(응답자 852명)**: 본 연구원 전국 현지통신원 2,000명 대상 우편 조사
<본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연구활용 목적으로 구성된 독농가로, 각 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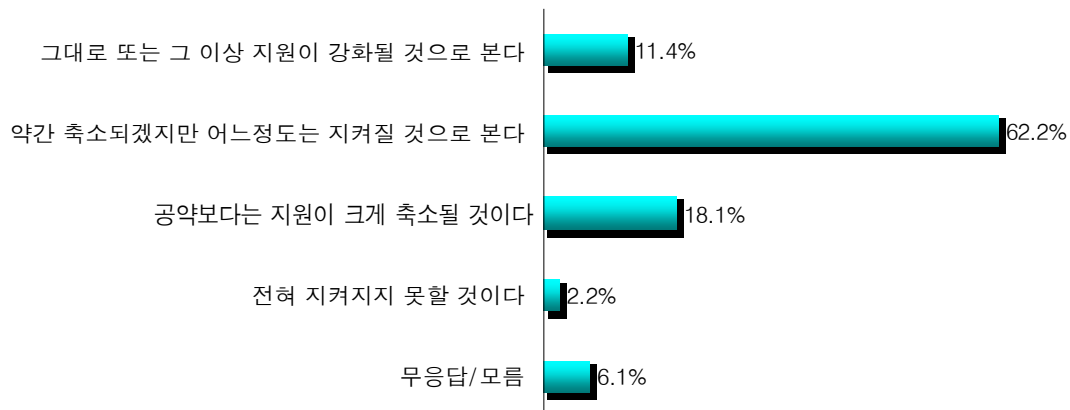
2.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

2.1. 농업인 10명 중 7명 “새정부 농정공약 지킬 것으로 기대”

농업인 73.6%는 새정부가 제시한 농정공약들이 당선자의 성향, 공약 내용의 구체성 등을 감안할 때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그 중 ‘공약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11.4%에 달해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약보다 지원이 크게 축소되거나(18.1%), 전혀 지켜지지 못할 것(2.2%)이란 의견도 20% 선으로 집계되어 우려의 시각도 일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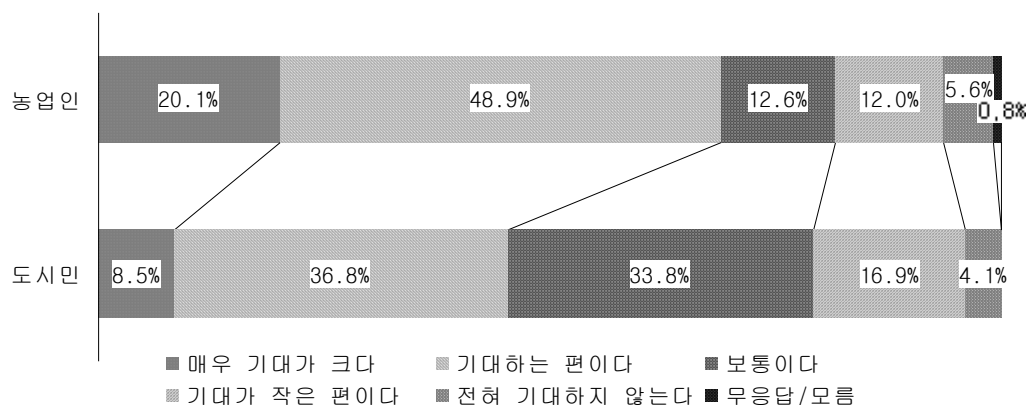
그림 1. 새정부 농정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농업인)



한편, 도시민과 농업인은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각자의 입장에서 새정부가 농업·농촌 문제를 앞으로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도시민 45.3%, 농업인 69.0%)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한다는 응답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의 2~3배에 달하였다.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감은 도시민보다 농업인이 23.7%p나 높게 나타나, 농업인들이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새정부 농업정책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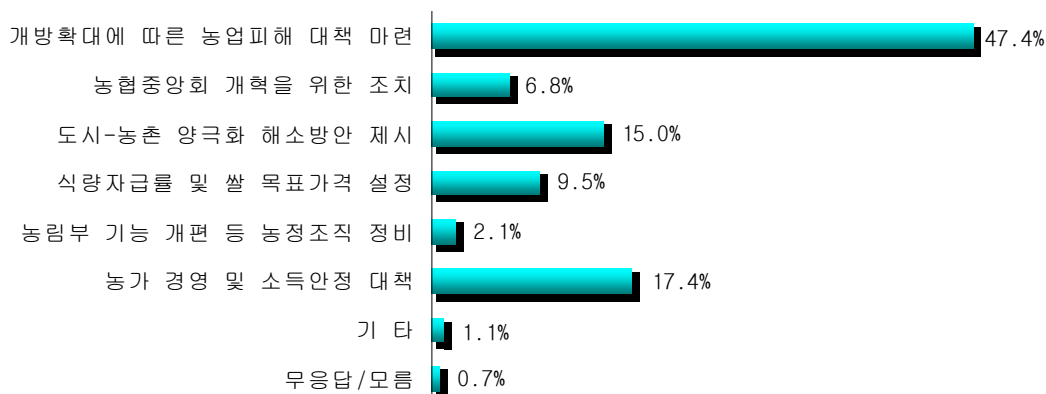


2.2. 농업인, 새정부 최우선 농정과제로 ‘개방 피해대책’ 꼽아

농업인들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농업분야 현안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마련’을 가장 많이(47.4%) 꼽았으며,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대책’(17.4%), ‘도시-농촌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15.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밖에 ‘식량자급률 및 쌀 목표가격 설정’(9.5%),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조치’(6.8%), ‘농림부 기능 개편 등 농정조직 정비’(2.1%) 순으로 꼽았다.

그림 3. 새정부 출범 후 최우선 해결 농정현안 과제(농업인)



2.3. 새정부 농정공약 중 농업인 최대 관심사는 ‘소득보전특별법’

새정부가 제시한 농정공약 중 관심과 기대가 가장 큰 공약으로는 ‘농어민 소득보전특별법제정’을 월등히 높게 1순위로 꼽았으며,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순으로 꼽았다. 농업인들의 관심은 대체로 소득과 관련된 직접 보상 성격의 공약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남북농업협력’, ‘수출 농식품기업과 지역기반 농기업 집중육성’, ‘농업회의소 설치’ 등 농업인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분야는 관심과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1. 새정부가 제시한 농정공약 선호도(농업인)

구 분	순 위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	1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농가부채동결법’ 제정	2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해 농지의 주인을 도시인까지 확대	3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도	4
농업인의 기초생활 보장,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보장	5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위해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	6
농촌지역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조성 등 농촌지역 교육여건 확충	7
농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농정협의체인 ‘농업회의소’ 설치	8
수출 농식품기업과 지역기반 농기업 집중 육성	9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남북농업협력기금 조성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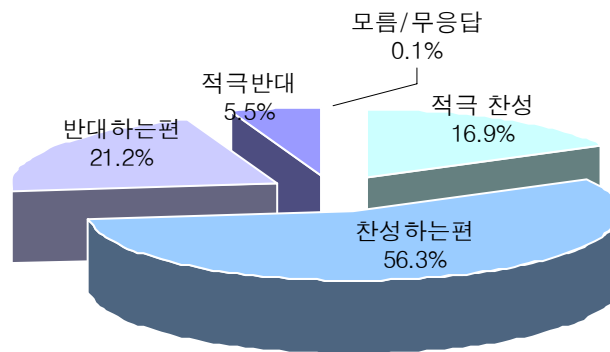
※ 가중합을 이용한 순위 매김(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2.4. ‘농지거래 규제 완화’ 도시민 73.2%, 농업인 68.5% 찬성

새정부의 공약 중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도시민 73.2%가 ‘찬성(적극 16.9%, 찬성하는 편 56.3%)’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농업인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해 68.5%가 찬성해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정책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농업인 중에서 반대 의견(15.7%)과 판단을 유보한 응답(10.1%)까지 더하면 25.8%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 농지거래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견해(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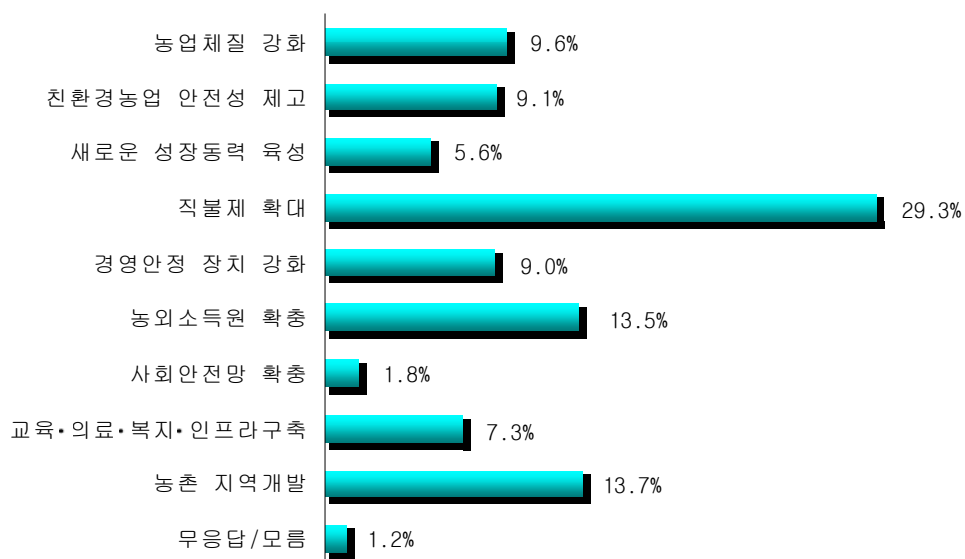


2.5. 농업인, 투융자사업 확대분야로 ‘직접지불제’ 가장 많이 꼽아

농업인들은 투융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개 주요사업에 대해 확대되길 원하는 분야로 ‘직불제 확대’를 가장 많이(29.3%)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촌 지역개발’(13.7%), ‘농외소득원 확충’(13.5%) 순으로 선호하였다.

‘사회 안전망 확충’(1.8%),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5.6%) 등 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분야는 선호도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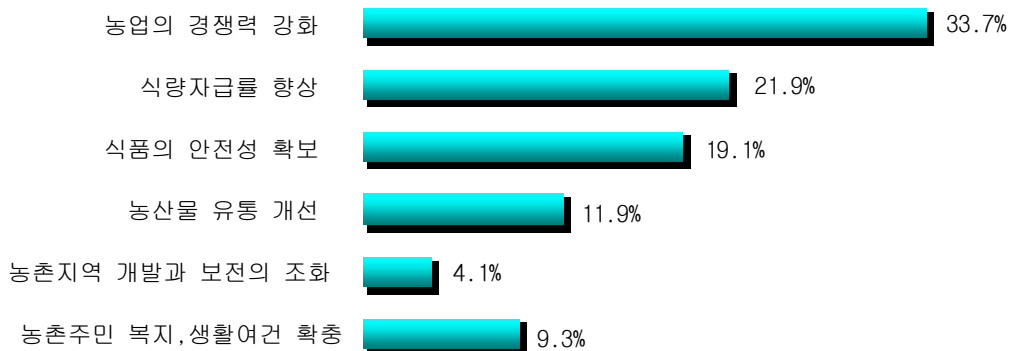
그림 5. 투융자사업 확대 선호 분야(농업인)



2.6. 도 시민은 농업예산 배분 1순위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선택

도 시민들은 농업예산 배분 우선순위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1순위로 (33.7%) 꼽았으며, 다음으로 ‘식량자급률 향상’(21.9%)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19.1%) 순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6. 농업예산 지원 우선 순위(도 시민)



3.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3.1.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견해 농업인보다 도 시민이 낙관적

농업·농촌 역할과 가치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10개 문항을 도 시민과 농업인에게 동시에 질문한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이 농업인은 6개 항목, 도 시민은 4개 항목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중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는데 동의하는 비중이 도 시민(63.0%)과 농업인(85.7%) 간에 가장 큰 차이(22.7%p)를 보였으며,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도 시민은 77.7%, 농업인은 94.5%가 동의해 인식차이(16.8%p)가 컸다.

한편, 도시민이 동의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은 ‘농업의 발전가능성’이 가장 커 도시민 35.8%, 농업인 19.6%로 16.2%p의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 있다’는 항목에도 도시민 35.2%, 농업인 26.6%가 동의해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농업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이같은 이유로 ‘자녀가 원하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응답도 도시민이 45.7%, 농업인 39.6%로 나타났으며,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항목도 도시민(86.5%)이 농업인보다(85.3%) 다소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2. 농업·농촌 역할과 비전, 가치인식

단위: %

구 분	동의한다		
	도시민 (A)	농업인 (B)	A-B
초중고 과정에 농촌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	73.9	81.9	-8.0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79.1	90.0	-10.9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45.7	39.6	6.1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79.1	81.8	-2.7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35.8	19.6	16.2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다	35.2	26.6	8.6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63.0	85.7	-22.7
우리나라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86.5	85.3	1.2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다	49.5	60.2	-10.7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77.7	94.5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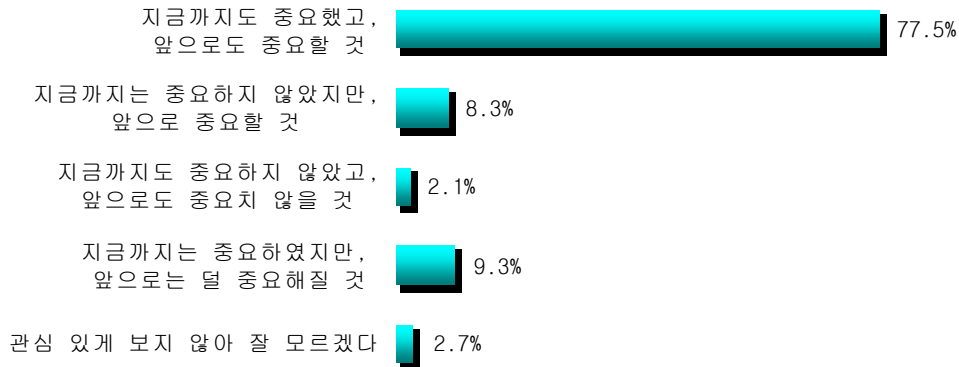
* A-B에서 - 는 도시민의 동의 비중이 농업인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

3.2. 도시민 85.8% “농업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중요”

도시민들은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5%가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는 응답(8.3%)까지 더하면 전체 도시민 85.8%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림 7.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 인식(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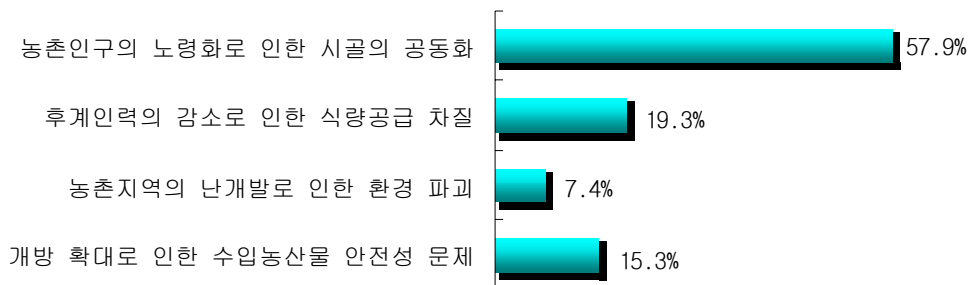


3.3. 도시민, 농촌문제 “노령화로 인한 시골 공동화” 가장 우려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 현재 농업·농촌 문제(57.9%)로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관되는 문제로 ‘농업 후계인력 감소로 인한 식량공급 차질’도 19.3%로 나타나 도시민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농업·농촌이 노령화와 후계인력 감소로 인해 현재의 모습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져 식량 제공 등의 기능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림 8. 소비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농업·농촌 문제(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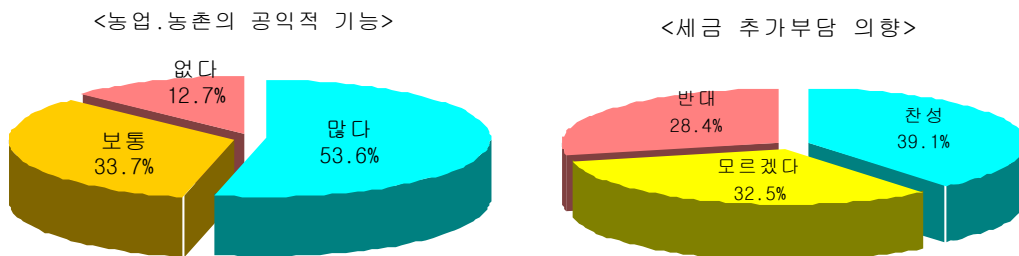
3.4. 농업·농촌 공익가치 유지에 세금부담 의향 39.1%

농업·농촌이 가진 1차적 기능인 먹거리 생산 이외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민이 53.6%(매우 14.3%, 많은 편 39.3%)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은 12.7%(별로 11.9%, 전혀 0.8%)로 낮게 나타나 공익기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찬성 39.1%, 반대 28.4%, 유보적 의견이 32.5%로 나타나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금부담에 찬성하는 비율(39.1%)은 전년보다 13.7%p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공익기능의 가치평가에 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데에는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아져 직접 비용부담에 개입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가치 인식과 세금 부담 의향



4. 농산물 시장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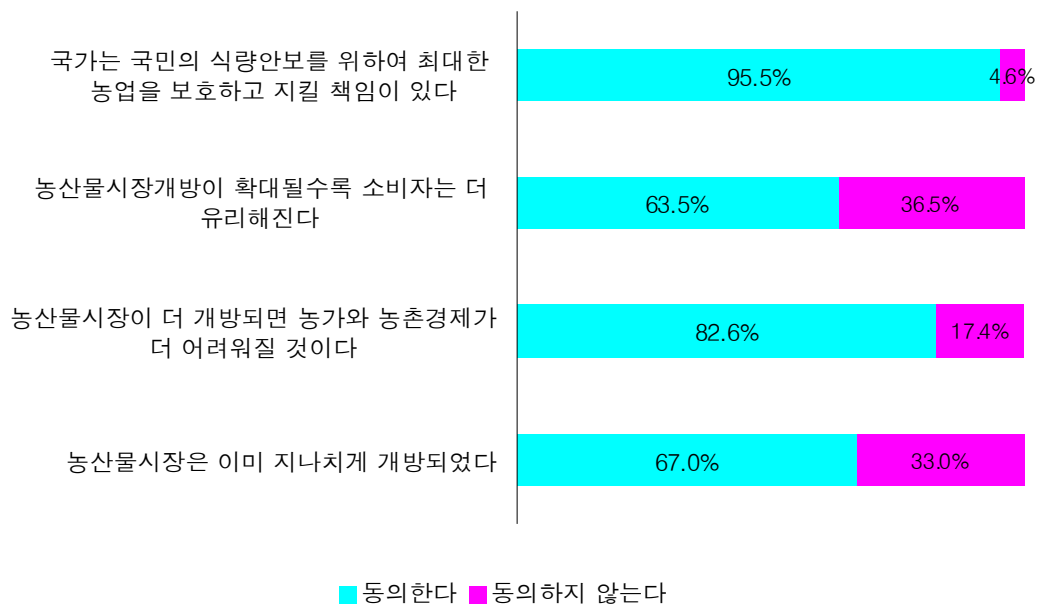
4.1. 도시민 95.5%, “식량안보 위해 국가가 농업 최대한 보호해야”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시장개방을 우려하는 응답 비율이 뚜렷이 높게 나타났다.

‘농산물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에 대한 동의가 67.0%,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에 대한 동의가 82.6%, ‘국가는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에 대한 동의가 95.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민 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더 유리해진다’는 의견에도 63.5%가 동의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부작용이 따르지만 소비자는 더 유리해 진다는 견해가 뚜렷하였다.

그림 10.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의견(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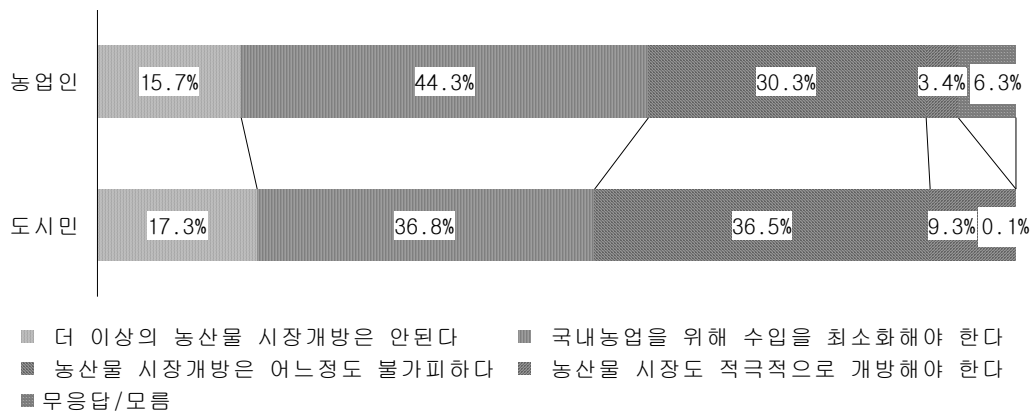


4.2. 국민 과반수 이상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신중해야”

농산물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민은 54.1%, 농업인은 60.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산물 시장개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인식도 도시민 36.5%, 농업인 30.3%로 나타났고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더하면 도시민 45.8%, 농업인 33.7%가 농산물시장 개방을 동조하였다.

그림 1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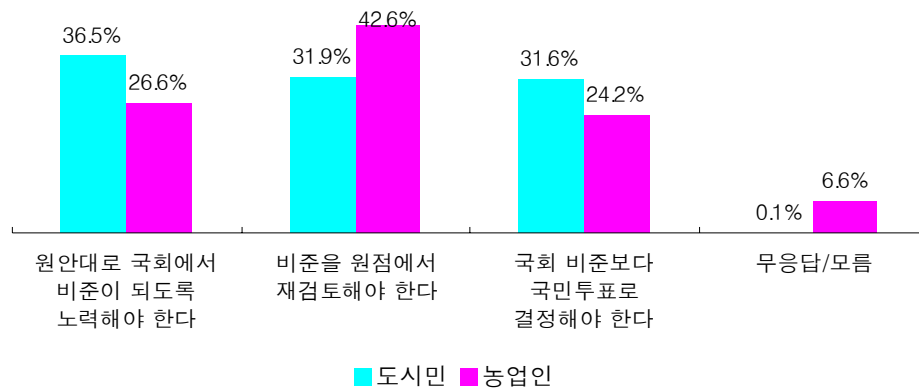


4.3. 한-미 FTA 비준, ‘다양한 시각차이’ 존재

한-미 FTA 비준의 과제를 안은 새정부가 비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물어본 결과, 도시민들은 ‘원안대로 국회 비준 노력(36.5%)’, ‘비준 원점에서 재검토(31.9%)’, ‘국민투표로 결정(31.6%)’ 등 세 가지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은 반대의견이 우세한 가운데(원점에서 재검토 42.6%, 국민투표로 결정 24.2%), ‘원안대로 국회 비준 노력’도 26.6%가 찬성하여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한-미 FTA 비준 처리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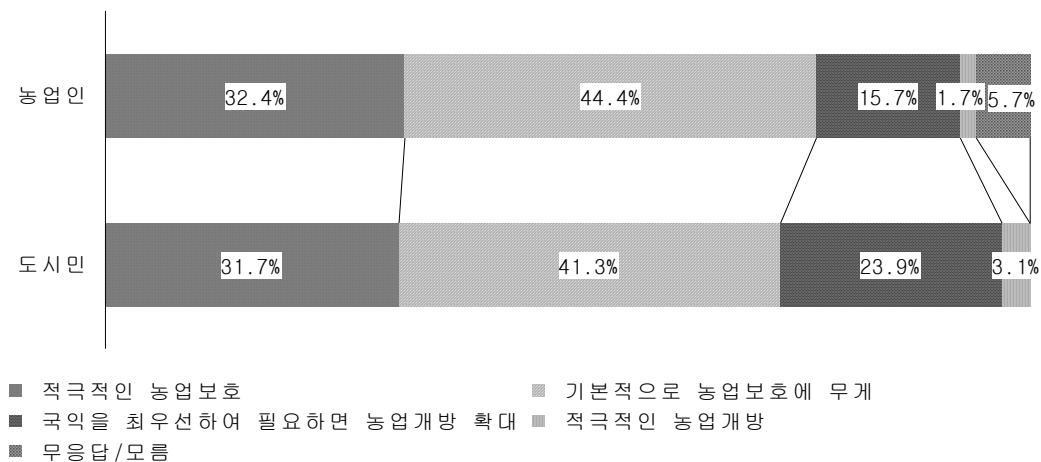


4.4. 도시민 73.0%, 농업인 76.8% “향후 통상협상에서 농업보호” 주문

현재 협상이 논의되고 있는 한-중, 한-EU FTA와 향후의 통상협상에서 ‘새 정부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민 73.0%, 농업인이 76.8%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민 중에는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23.9%가 찬성하고 있고, 여기에 적극적인 개방 의견까지 포함하면 27.0%가 개방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농업인은 17.4%) 여전히 농업인과 시각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향후 국가 통상협상에서 농업문제의 접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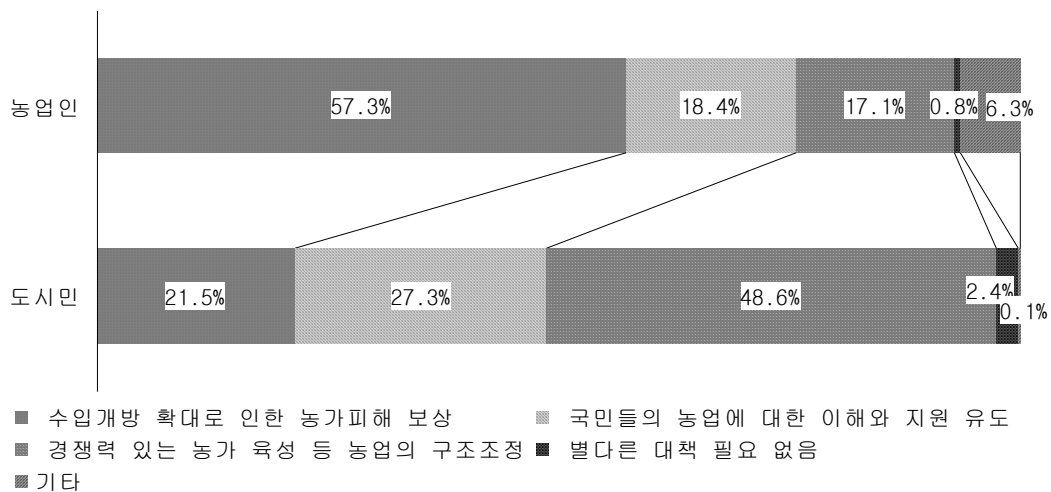


4.5. 농산물 시장개방 관련 정부의 역할 도시민-농업인 ‘시각차 뚜렷’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시민은 48.6%가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 등 농업 구조조정’을 꼽은 반면에 농업인은 57.3%가 ‘수입개방 확대에 의한 농가 피해 보상’을 꼽아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도시민은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유도’(27.3%), ‘수입개방 확대에 의한 농가피해 보상’(21.5%)을 꼽은 반면에 농업인은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유도’(18.4%),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 등 농업의 구조조정’(17.1%)으로 꼽았다.

그림 14. 농산물 시장개방 관련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5. 도시민의 농업·농촌 수요

5.1. 농산물 구입 시 고려하는 조건 ‘안전성-품질-생산지’ 순으로 꼽아

가격, 브랜드 유무, 생산지, 안전성, 품질(맛)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도시민

에게 제시한 후 농축산물 구입 시 고려순서를 물어본 결과, 1순위로 ‘안전성’을 꼽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격 등 다른 조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다음으로는 ‘품질(맛)’, ‘생산지(국산/외국산)’ 순으로 꼽았으며 비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조건에 비하면 ‘브랜드 유무’를 꼽은 비율은 다른 조건들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표 3. 농산물 구입 시 고려하는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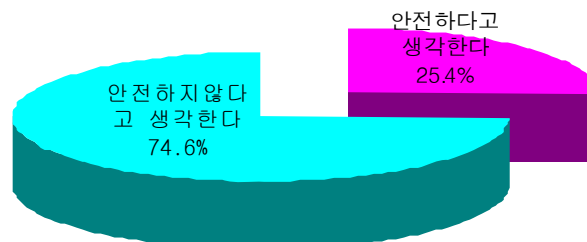
구 분	순 위
안전성	1
품질(맛)	2
생산지(국산/외국산)	3
가 격	4
브랜드 유무	5

※ 가중합을 이용한 순위 매김(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순위 1점).

5.2.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 74.6%

한-미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언론매체 보도가 많았던 미국산 쇠고기 에 대해서는 74.6%의 응답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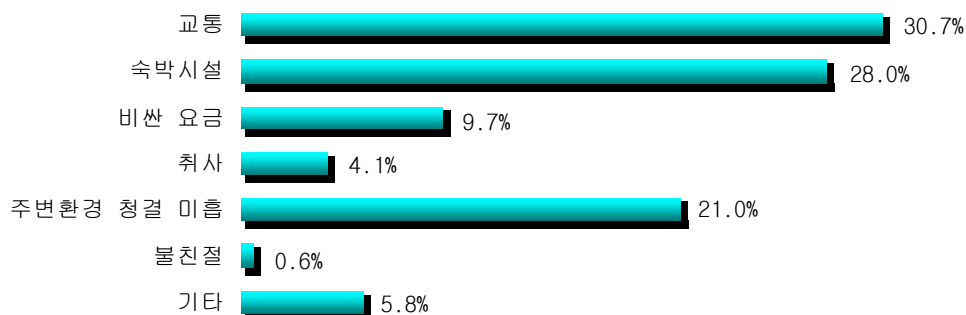
5.3. 농촌관광 경험자 중 45.9%가 ‘만족’, ‘교통·숙박’ 시설 불만족

2007년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농촌을 관광한 도 시민은 응답자의 21.3%(320명)로, 이들 중 45.9%는 농촌관광에 대해 ‘만족(매우 5.0%, 대체로 40.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6%인 반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40.9%로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만족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농촌관광 불만족 요인으로는 30.7%가 ‘교통’, 28.0%가 ‘숙박시설’, 21.0%가 ‘주변환경 청결 미흡’을 꼽아 여행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편리함과 청결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농업·농촌 관련 여가활동/관광여행 시 불편사항(도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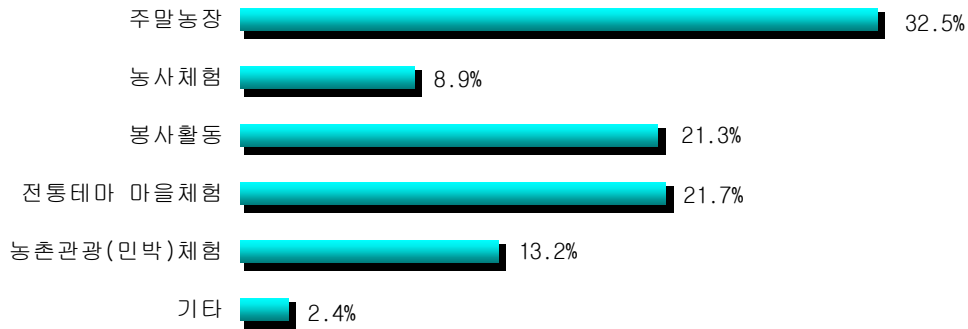
5.4. 62.7%가 농촌 체험으로 주말농장 등 생산활동 선호

향후 가장 해보고 싶은 농촌관련 활동으로는 ‘주말농장’이 32.5%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전통테마마을 체험’과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이 각각 21.7%와 21.3%로 비슷한 수준에서 뒤를 이었다.

‘감자캐기 등 농사체험(8.9%)’까지 고려할 경우 농촌에서 ‘직접 생산

(주말농장 32.5%, 일손돕기 21.3%, 농사체험 8.9%)’하는 활동이 62.7%나 되어, 향후 다양한 생산체험 상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가장 해보고 싶은 농촌활동



6. 시사점

새정부 출범에 앞서 실시한 이번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새정부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농촌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새정부 최우선 과제로 개방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농정공약 중에서는 소득보전특별법 제정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소득안정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였다. 이에 반해 도시민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를 바라고 있는 등 농업인과 시각 차이를 보였다.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도시민 73.2%, 농업인 68.5%가 찬성하였으나 우려의 시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정책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해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낙관하고 있으나, 농업·농촌 공익가치 인정(53.6%)과 비용부담 의사(39.1%)는 매년 감소하는 것

으로 조사되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현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 95.5%는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가 농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거나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45.8%에 달해 농업인과 인식차이가 뚜렷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해서 농업인은 반대 의사(42.6%)가 분명하지만 도시민은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도시민 10명 중 7명이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도시민 농산물 구입 조건으로는 안전성-품질(맛)-생산지(국산/외국산) 순으로 파악되어 저가의 농산물 공급정책을 탈피하고 안전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도시민 10명중 2명 정도(21.3%)가 지난 한 해 농촌관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절반 정도(45.9%)만 만족했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 요인으로 꼽은 교통, 숙박 등 농촌관광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촌지역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요구된다.